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승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 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신문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담당: 양영미 간사, 전화 723-4255 전송 723-5055)
 제 목 서경원 전의원 고문·조작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
 날 짜 1999. 04. 01. (총 3 쪽)

협 조 의 회

성 명 서

서경원 전의원 고문·조작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

1989년 밀입북사건으로 오랜 수감생활을 하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이 3·1일 특사로 풀려났다. 서경원 전의원 비서 그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씨 등은 최근 “고문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준)을 발족시키며 과거 정권에서 안기부에 의한 고문·조작사건들을 진상규명하려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전의원은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15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현재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형근의원은 알려진 바와 같이 전직 안기부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경원 의원뿐 아니라 사노맹사건의 박노해 시인,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 위 시민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안기부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각종 공안사건에 대해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형근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정형근의원은 안기부 재직 당시 고문가해 이외에도 92년 대선 당시 흑색선전으로, 공금횡령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경원의원의 고소가 공정한 심판과정을 거쳐 진상이 만천하에 밝혀지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치를 논하는 국회에 이런 전력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이 국민의 대표로서 재직할 수 있는가라는 자격의 문제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취임 1년 여 지난 현재,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과거 독재정권 치하 발생했던 인권침해사태들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관건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과정에서 보듯 아직도 독립성과 활동의 범위가 법무부에 예속된 채 국무회의를 통과된 인권법안을 강행하는 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혁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선명한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거청산을 위한 재수사의 과정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담보상태에 있는 진정한 개혁과 인권상황 개선, 민주화의 진전에 국민은 경제회복에 가지는 관심만큼 근본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공동소장 신윤환 · 이정옥 · 채수일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천리안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고 소 장

고소인 서 경 원
피고소인 정 형 근

대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서 경 원(
서울

피고소인 정 형 근(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번지 의원회관 506호

명예훼손 등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전 국회의원이고, 피고소인은 전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국장으로서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자인바,

피고소인은 1999. 3. 11.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대중 정권은 간첩까지 동원한 비열한 ‘정형근 죽이기’ 정치보복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에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는 바, 그 내용은

“ 안기부내에 정형근 특별 내사팀을 구성, 도청 미행 친인척 계좌추적 등 온갖 뒷조사를 샅샅이 했으며, 심지어 본 의원의 보좌진 여비서 등의 전화 휴대폰에 대하여까지 불법도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북한 고정간첩으로 10년을 선고받고 8년 반을 복역한 서경원, 그리고 비서관인 방양균 등을 국민에 대해 한마디 설명과 이해를 구함도 없이 무조건 사면복권시키고, 이들을 사주하여 어제(3.10) 기독교회관에서 이른바 ‘고문 국회의원’이라

고 매도하는 데에는 본 의원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 고문조작의혹 등등은 간첩들의 상투적인 보위수단에 불과합니다”

“ 당시 평민당은 간첩 서경원 밀입북 사건이 김대중 총재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의 연루의혹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당운을 걸고 총력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 어떻게 소위 국회의원 신분인 사람을 수사과정에서 고문할 수 있습니까”

“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북풍과 총풍 등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지어 안기부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 급기야는 간첩을 잡아내는 안기부가 간첩과 제휴하여 대공수사의 책임자였던 야당의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실체입니다”

등으로서,

고소인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북한에 입국하여 김일성 주석과 독대하면서 남파간첩 중단 요구, 휴전선 비방방송 중단, 이산가족 면담과 왕래 서신교환 등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당시 실정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은 것일 뿐, 고소인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하였거나 특히 “고정간첩”이 아님은 공지의 사실이고,

고소인 등은 석방 후 수사과정상 안기부에 의한 고문 등을 문제삼아 마찬가지로 안기부에 의해 고문을 당한 바 있던 피해자들을 모아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순수 시민단체로서 “고문 국회의

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를 결성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모두 과거 안기부의 고문피해자로서 고소인이나 이 단체의 활동이 안기부와 제휴한 것이 아님이 그 단체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직접 구타한 사실까지 있어, 고소인이 고문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고문사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고문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 때문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기자회견문과 같이 마치 고소인등이 고정간첩으로서 현정부 특히 안기부와 제휴하여 있지도 않았던 고문을 주장하며 자신을 매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고소인을 "고정간첩"으로 표현함으로써 고소인을 모욕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소인 진술시 진술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기자회견문 사본
1. 각 신문기사

1999. 4.

고소인 서 경 원

대검찰청

귀중

F) 538-0636 김성수

〈정형근 의원 기자회견문〉

“김대중 정권은 간첩까지 동원한, 비열한
「정형근 죽이기」 정치 보복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야당 총재시 문익환 밀입북 사건, 서경원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하여 본 의원으로 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92년 대통령 선거는 이선설 간첩 사건이 결정적 패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안기부 1차장 재직시 통상적 업무수준의 지자체 연기 실시 검토 관련 여론조사 문건을 빼내어 이를 언론에 폭로하는 등 집요한 억지 정치공세로 본 의원을 사직케 한 바 있습니다.

동인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자 취임도 하기 전에 이른바 DJ 비자금 폭로를 본인이 주도한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을 사법처리할 목적으로 검찰로 하여금 본 의원을 조사케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안기부, 청와대 사직동맹 등을 동원, 갖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정형근 죽이기」 정치 공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실상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권을 잡자 바로 착수한 것이 있지도 않은 이른바 「북풍」이라는 기상천외의 사건을 조작한 것이며, 본 의원이 이에 연루되어 있다 하여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언론 공작을 통해 구속시키려고 하였으나 무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둘째, 안기부 내에 정형근 특별 내사팀을 구성, 도청·미행·친인척 계좌추적 등 온갖 뒷조사를 살살이 했으며, 심지어 본의원의 보좌진·여비서 등의 전화, 휴대폰에 대해서 까지 불법 도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 의원의 강력한 항의로 이제는 철수했으나, 본 의원의 집 앞 방법 조소에 4-5명의 건장한 사복 형사를 상주시켜 본 의원의 출입시간 파악 등을 통한 동태 감시, 차량번호 추적을 통한 출입자 체크 등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넷째, 우리 한나라당에서 본 의원을 정보위에 배정하자, 안기부를 동원하여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한사코 본 의원의 정보위 배정을 거부케 하는 등 일찍이 의정 사상 전례가 없는 정치 보복으로 현재도 정보위에 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김대중 정권은 이와 같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내사를 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급기야는 월간지 「신동아」를 이용, 박노해까지 끌어들이 갖가지의 음해와 매장 공작을 자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와 관련,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본 의원이 착안한 것이라는 등 천인공노할 발상으로 본 의원 죽이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방송사를 동원하여 본인을 매도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가, 안기부 직원의 회유에 실패하자 준비한 기획이 수포로 돌아간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14일 대정부 질의에서 김대중 정부의 국정 파행에 대해 "정권교체나 이념교체나"라는 제목으로 신랄한 비판을 가하자, 국민회의의 모 의원을 사주하여 동료 의원에 대해 온갖 모욕적 언사를 써가며 매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총재로 있는 한국BBS중앙연맹에서 그만둔 특정 지역 출신 직원까지 동원하여 본 의원이 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고소장을 팩스로 배포하는 등 본 의원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의 시익구인 부산 북구에 정형고를 죽이기 위해 거물 정치인을 다음 총선에 출마토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외곽 때리기에, 그리고 언론 공작에 탁월한 김대중 정권은 친여 언론과 친김대중 외곽단체를 동원하여 본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치졸한 정치공작에 일일이 대응하려니 참으로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칼자루를 쥐고 기상천외한 짓을 일삼고 있는 김대중 정권이 살생부 1호로 지목한 본 의원에게 대해 무슨 짓까지 할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고정 간첩으로 10년을 선고 받고 8년 반을 복역한 서경원, 그리고 비서관인 방양균 등을 국민에 대해 한마디 설명과 이해를 구함도 없이 무조건 사면 복권시키고, 이들을 사주하여 어제(3.10) 기독교 회관에서 이른바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라는 사이비 단체를 만들어 서경원과 방양균이 본 의원을 「고문 국회의원」이라고 매도하는 데에는 본 의원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서경원은 지난 88년 8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밀입북하여 김일성 및 허담을 면담하고, 허담으로부터 지령과 함께 공작금 5만불을 받아 남파된 간첩임이 확정 판결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밀입북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 공작금을 수령하고, 또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을 당시 국가 안보를 위해 직무상 수사하였을 뿐입니다.

고문 조작 의혹 뽕뽕은 간첩들의 상투적인 보위수단에 불과합니다.

당시 평민당은 간첩 서경원 밀입북 사건이 김대중 총재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의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당운을 걸고 총력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동 사건은 매일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위 국회의원 신분인 사람을 수사 과정에서 고문할 수 있습니까.

만약 서경원과 방양균의 주장대로 본 의원이 고문을 가했다면, 본 의원을 고소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수사 당시나 재판 과정 중에서 본 의원을 고소하는 등 별도의 행동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석방되자마자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 운운」 하는 사이버 단체를 동원하여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배경과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 동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김대중 총재가 기소된 사실을 서경원이 고문을 통해 부득이 하게 허위 자백하게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충정 읊이래껏하는 비는 아님니다.

현 정권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른바 비현실적이고 현상적인 햇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간첩과 좌익 사범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대북 안보관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있으며 안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공요원들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있으며, 간첩들은 기세 동등하게 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북풍과 총풍 등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지어 안기부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간첩을 잡아내는 안기부가 간첩과 제휴하여 대공수사의 책임자 였던 야당의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실체입니다.

이제 과연 어느 누가 어느 국민이 간첩을 신고하겠습니까. 이 정권이 들어선 후 지금까지 간첩을 검거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 국민누구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 보면서 본 의원은 이 정권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참으로 우려되는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정직이 참으로 죽이고 싶도록 믿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북한 간첩까지 동원하여 정치 보복을 감한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세계가 새로운 천년과 다음 세기를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이 때, 이제 김대중 정권은 이와 같은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보복 공작을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만약 이대로 계속 김대중 정권의 「정형근 죽이기」가 진행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999. 3. 11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형근

野 정형근의원 前歷싸고 또 시비

“고문수사 주역” “정치보복”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전력(前歷)시비 공방에 또 불이 붙었다.

지난해 대정부 질문 때 국회의 유선호(柳宣浩)의원이 “조사과정에서 DJ와 연결시키기 위해 徐전(徐健)의원을 주역으로 규탄하는 등 안기부 고문수사 관행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두번째다.

이번엔 88년 북한을 밀입북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사로 복권된 서경원(徐敬元)전 평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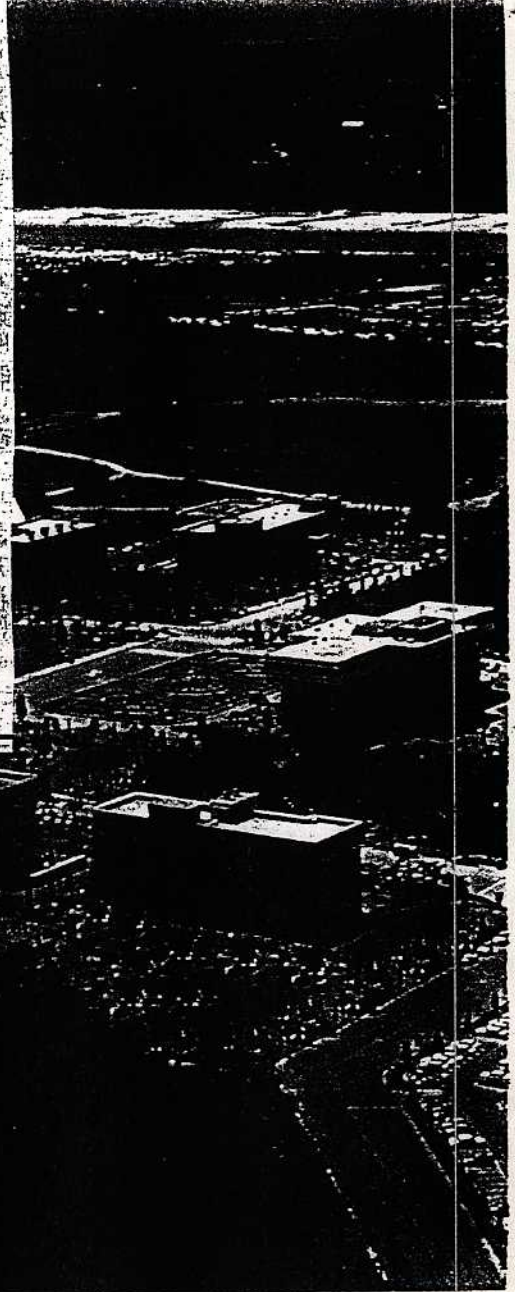
옛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鄭의원의 고문설을 제기한 徐전(徐健)의원이 10일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를 결성, 鄭의원 퇴진 운동에 나선 것이 기록제가 됐다.

鄭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11일 기자회견을 자청, “현 정권이 徐전(徐健)의원을 동원, 비열한 정형근 죽이기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보복 증단을 촉구했다.

鄭의원은 “徐전(徐健)의원은 88년 밀입북, 김일성(金日成)과 허담을 면담하고 공작금 5만달러를 받아 남파된 간첩인이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고문조작 의혹은 간첩들의 상투적 보위수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렇게 되자 국회의측은 “과거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참회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정치보복 운운하며 본질을 희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점민 기자

중앙일보 1999.3.12 기사 <jmlee@joongang.co.kr>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과 서경원(徐敬元)전평민당 의원이 때 아닌 고문공방을 벌이고 있다. 간첩죄로 장기 복역하고 있던 특사로 나온 서전 의원은 밀입북사건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던 정의원이 현역의원이던 자신을 고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원은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정부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대비해 본다.

정형근 현의원

‘고문’ 공방

서경원 전의원

12월 10일

“상투적 수단 일본
‘정형근 죽이기’
또다른 정치공작”

◇서 전의원 주장=서전 의원은 88년에 밀입북을 해 김일성과 하담을 면담하고 공작금 5만달러와 지령을 받고 남과북 간첩활동을 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고문조작 주장은 간첩들의 상투적인 보위수단에 불과하다. 현 정권은 ‘정형근 특별내사팀’을 구성해 도청·미행·계좌추적 등 뒷조사를 벌이는 등 정치보복을 계속하고 있다. 전화와 휴대전화까지 불법도청하고 있고 사복행사를 상주시키며 동태를 감시해 왔다.

이같은 ‘정형근 죽이기’는 본인이 김대통령의 국정과행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정치공작이다.

“4시간 30분동안 39.3.12
정의원 직접 구타
아직 환영 시달려”

◇서 전의원 주장=89년 6월24일에서 26일 사이에 안기부로 끌려갔다. 안기부에 들어온 지 열흘쯤 지난 어느날 정형근이 들어와 단둘이 남았다. 정은 취조실에 들어오자마자 온갖 욕설로 추궁하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머리, 얼굴, 가슴을 주먹과 구둑발로 집중적으로 때렸는데 맞은 부위에서 그릇 세개가 넘길 만큼 피가 흘렀다. 밤 9시15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45분까지 그렇게 맞았다.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정형근이 찬 시계를 봤기 때문이다. 요즘도 찬 자리에 들면 그 당시 환영이 떠오르고 맞은 부위가 쑤시고 저린다.

한병권 김호경 bkhan@kukminilbo.co.kr



1999.3.12

한겨레신문기사

정형근의원 직접 고문수사했다

서경원씨등 "옛 안기부 대공수사국장때 당했다" 주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옛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재직 시절 직접 고문 수사를 했을까 안했을까. 필입북사건으로 구속돼, 간첩죄로 복역하다 3·1절 특사로 석방된 서경원 전 의원과 방양균씨 등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고문 가해자 국회의원 정형근을 비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옛 안기부에

서 수사받을 때 정 의원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정 의원의 '국회 퇴출'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 의원이 지난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때 축소 은폐를 지시해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말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지칭해 "현 정권의 시주를 받은 것"이라며 "어떻게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사람을 고문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

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이 국가정보원 안에 '정형근 특별내사팀'을 구성해 비서의 전화까지 불법도청하는 등 은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정보위 배정하는 등 '정형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해선 '고문수사' 관련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당 주변에서 "(정형근 죽이기 주장은) 지나친 과반응 아니냐"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정 의원의 '특별내사팀'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멋대로 해도 되는가"라 분통을 터뜨렸다. 여현호기



정형근 '홍준표 다음은 나?'

서경원前의원 고문주장에 반박

"정치보복 공작 일환" 표적설제기 강력 반발
在野 가세움직임 신경

옛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냈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11일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정형근 죽이기를 위한 정치보복 공작의 일환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간첩죄로 장기복역하고 3·1절 특사로 나온 서전 의원은 필입북사건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던 정 의원에 게 고문을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 하고 나섰다. 이에 일부 재야단체가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8년 사건 당시 수사 받은 서씨는 북한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분명한 간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권을 겨냥, [간첩을 잡아내는 국가정보원이 간첩과 제휴, 대공수사 책임자였던 야당의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정의원측은 "당내에서 정의

원과 함께 대공공작의 싹을 이루던 홍준표(洪準杓)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날개가 꺾이자 이제는 정의원들 잡으려 하고 있다"며 표적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의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정공사건과 관련한 옛 안기부의 고문 의혹 제기 등 대야(對與)투쟁의 전면이 켜진 것은 그의 처지는 자신의 고문시비와 큰 관련이 없다. 김근철기

鄭亨根 죽이기 논란

이기에 떠나서고 있는 것이 현정권의 일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안에 '정신병원'을
 사립을 만들어 도청과 피해 및 정...
 徐敏元씨들, '고문 장본인' 측출운동에...
 鄭의원 "간첩까지 동원한 정치보복 공작...
 10여명은 10일...
 안기부...
 (鄭亨根) 의원이 11일 "김대중(金大中) 정권이...
 간첩까지 동원해 정치보복 공작을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鄭 의원은 "현정권은 북한 고정간첩으로 10년...
 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서경원(徐敬元) 등을...
 무조건 사면복권시키고, 이들을 사주해 나...
 '고문 국회의원'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그는 "서경원은 88년 8월 18일부터 20일...
 사의 밀입북해 김일성을 면담하고 하담으로부터...
 공작금 5만달러를 받아 답과된 간첩임이...
 결과 제후해 대공수사 책임자였던 야당의원 죽...

/李鍾遠기자 jwie@chosun.com
 /李漢洙기자 hlee@chosun.com

